

민주연구원 “3대 메가프로젝트 기획 시리즈③ : 첨단산업 경쟁력을 위한 전력시장 혁신” 정책브리핑 발간

-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원장 이재영)은 7월 20일(월), 『3대 메가프로젝트 기획 시리즈③: 첨단산업 경쟁력을 위한 전력시장 혁신 - 전력감독원 설립을 중심으로』 정책브리핑을 발간했다.
- 이재영 원장은 “반도체·AI 데이터센터 등 국가 첨단산업 경쟁력은 기업이 필요한 전력을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공급확약 체계' 구축에 달려있다”며, “이번 브리핑은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력공급 병목의 원인을 분석하고, 공급확약 체계 구축을 위한 전력시장 혁신과 독립적인 전력감독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 브리핑은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가 약 1,400조 원 규모의 투자와 약 39.7GW의 신규 전력수요를 수반하는 만큼,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보장하는 시장제도 혁신이 메가프로젝트 성공의 필수 전제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현행 전력시장에서는 메가프로젝트 추진기업은 공급확약이 없어 투자 결정을 주저하고, 전력공급기업은 장기적인 수익성과 제도적 예측 가능성의 부족으로 투자를 망설이는 구조적 교착 상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 이어, 브리핑은 이러한 구조적 교착 상태를 해소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과 공급확약 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과제로 다음과 같은 전력시장 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 첫째, 기업이 필요한 전력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공급받을 수 있는지 예측 가능한 ‘공급확약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둘째, 이를 위해 전력가격체계와 전력망 접속규칙을 개선하고 유연성시장 활성화, 계통운영 혁신 등 전력시장 전반의 제도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셋째, 이러한 시장규칙이 공정하고 일관되게 집행되도록 시장감시, 계통운영 검증 및 분쟁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전력감독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 민주연구원 배지영 연구위원은 “이번 브리핑에서는 첨단산업의 경쟁력은 더 이상 발전 설비의 양적 확충이 아니라, 기업에는 '공급 확실성'을, 투자자에게는 '규칙 확실성'을 제공하는 전력시장 제도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전력감독원은 공급확약 체계의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로써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